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여성가족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0일, 이달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3. 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달회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

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 가.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현행법 제31조의2에서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국가기관등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성희롱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

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체 국가기관등에서의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불이익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는 「2024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 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가기관등에서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이 법은 장(제1장부터 제6장까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계상 제7장(벌칙)을 신설하여 개정안 제54조(벌칙)는 제7장에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31조의2제3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봄.

#### 나.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한규)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고, 경미한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 수정이유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시행일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 경미한 체계자구를 수정함.

### 수정주요내용

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2제3항 전단 중 “사건처리 기간동안”을 “사건 처리기간 동안”으로, “행위자”를 “성희롱 행위자”로 한다.

안 제5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벌칙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br>· ② (생략)<br><u>&lt;신설&gt;</u> |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br>· ② (현행과 같음)<br>③ <u>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처리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br>④ · ⑤ (생략) |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br>· ② (개정안과 같음)<br>③ -----<br>-----<br>-----<br>----- <u>사건 처리기간 동안</u> -----<br>-----<br>-----<br>----- <u>성희롱 행위자에</u> -----<br>-----<br>-----<br>-----<br>-----<br>-----<br>④ · ⑤ (개정안과 같음) |

|                                        |                                                                                                                                            |                                                                                                                                                                                                                   |
|----------------------------------------|--------------------------------------------------------------------------------------------------------------------------------------------|-------------------------------------------------------------------------------------------------------------------------------------------------------------------------------------------------------------------|
| <p>③ (생략)</p> <p><u>&lt;신설&gt;</u></p> | <p>⑥ (현행 제3항과<br/>같음)</p> <p><u>&lt;신설&gt;</u></p> <p><u>제54조(벌칙)</u> (생략)</p> <p><b>부칙</b></p> <p><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p>⑥ (개정안과 같음)</p> <p><u>제7장 벌칙</u></p> <p><u>제54조(벌칙)</u> (개정안과 같음)</p> <p><b>부칙</b></p> <p><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적용례)</u>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한다.</p>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⑤ 제1항에 따른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제5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 ② (생략)<br><u>&lt;신설&gt;</u> |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u>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br>④ <u>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br>1. <u>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u><br>2. <u>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u> |
| <u>&lt;신설&gt;</u>                                      |                                                                                                                                                                                                                                                                                                                                                                                                                 |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  
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  
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  
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  
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  
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  
는 취업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  
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  
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  
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

|                    |                                                                                                                                                                                                                |
|--------------------|----------------------------------------------------------------------------------------------------------------------------------------------------------------------------------------------------------------|
| <p>&lt;신 설&gt;</p> | <p>는 불이익조치</p>                                                                                                                                                                                                 |
| <p>③ (생 략)</p>     | <p>⑤ 제1항에 따른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p>&lt;신 설&gt;</p> | <p>⑥ (현행 제3항과 같음)</p>                                                                                                                                                                                          |
| <p>&lt;신 설&gt;</p> | <p>제7장 벌칙</p>                                                                                                                                                                                                  |
|                    | <p>제54조(벌칙)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